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9호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5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세 및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나. 우대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다.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라. 우대 및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마. 선정등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sjulee20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대 및 지원대상) 우대 및 지원대상은 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에 한한다)의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
2. 유공납세자 : 제1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선정기준 및 절차) ① 유공납세자는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② 유공납세자의 선정인원은 자치구별 납부자 수와 납부액을 참고하여 매년 시장이 자치구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할 수 있다.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2. 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 홍보

3.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3년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수수료 감면

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에게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선정등의 취소)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의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우대 및 제5조의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의 탈세 및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된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앞쪽)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성명 :
(법인명, 회사명)

주소 :
(소재지)

적용기간 :

차량번호 :

(뒤쪽)

제 호

유공납세자증

이 증은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임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인)

-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이 증은 관계인이 요구시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레저세
- 다. 담배소비세
- 라. 지방소비세
- 마. 주민세
- 바. 지방소득세
-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 가. 지역자원시설세
- 나. 지방교육세

② (생략)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생략)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 및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